

텅빈 합동연설회...민주 5·4전대 흥행 비상

부산·경남, 울산·대구 대의원 참석 절반도 안돼 썰렁

‘원샷 경선’ 방식·계파싸움 양상에 국민·당원들 외면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의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축제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친노-비노, 주류-비주류의 대립각이 오히려 부각되는 형국이다.

대선 패배 이후, 지리멸렬한 행태를 보여 온데다 당권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중립감이 떨어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고됐기는 했지만 기대 이하의 흥행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부산·경남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닷을 올린 전대본경선의 초반 흥행 성적표는 당내에서조차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일정이었던 부산 연설회의 경우 행사장인 400석 규모의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이 연설회 시작 무렵 150석 정도만 채워지는 등 썰렁한 분위기였다. 14일 울산과 대구 토론회도 사정

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지도부 선출 방식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권역별 순회 합동연설회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했지만 이번엔 합동연설회를 모두 마친 뒤 한꺼번에 투표를 하는 ‘원샷 경선’ 방식을 채택했다.

연설회 후에 현장 투표로 이어지지 않으니 대의원들의 출석이 저조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당대회 관세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6·9 전대 과정에서는 김한길 당시 대표 후보가 이화한 후보의 대세론을 쥐고 첫 경선지인 울산에서 1위 등으로 올랐는데 이번엔 남기등 후보에게 선 선 과정에서 후보 간의 순위가 뒤 바뀌

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흥행 바람몰이에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번 대표 경선의 경우엔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한길 후보의 대세론이 견고하게 형성, 전대 분위기가 자칫 맛있게 흘러가면서 역동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다.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둘러싼 주류-비주류간 계파 싸움이 부각되고 정작 과감한 혁신안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국민과 당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함에 따라 스포트라이트가 대표 경선에 집중되면서 최고위원 경선이 ‘2부 리고’로 전락한 점도 흥행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비롯, 여당의 핵심 인물인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등이 4·24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재·보선에 쏠린 영향도 있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겹치다 보니 민주당 지도부도 좀처럼 흥행 제고를 위한 목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패배로 이번 전대에 민주당의 대주류들이 대거 불참함에 따라 흥행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전대의 흥행 부진은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으로 혁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출신이 지도부 진출, 목소리내야”

민주 최고위원 호남 유일 후보 유성엽 의원

“민주당 뿌리인 우리 호남 출신이 반드시 지도부에 진출해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장을 던진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15일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든 선거에서 우리 호남은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호남출신 최고위원 한 명 없는 민주당 지도부는 상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실시된 예비경선에서 생존, 유일하게 호남에 지역구를 둔 최고위원 후보가 된 유 의원은 “전남의 황주홍 의원이 같이 최고위원에 진출해 민주당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안타깝게 됐다”며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재창당 수준의 민주당 혁신작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유성엽도 뭔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관대하게 축하해 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주 민주당 대선 경선투표위원회에서 대선경가 보고서에 대한 민주당 대의원들의 여론조사 결과 65.4%가 동의하는 결과 나왔다”며 “민주당의 새 희망은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찾아야 하며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안겨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朴정부 50일, 총체적 난국” 평가절하

“윤진숙 임명 강행뿐 오늘 청와대 만찬 불참”

민주통합당은 15일 취임 5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에서 ‘인사난맥상’에 대해 사과하며 야당과의 소통에 나선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안보와 민생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강은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윤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가 인사 실례를 극복하는 전 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레야 박 대통령의 부실인사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소통정치로 선회하는 변화의 조짐을 보여 다행”이

라며 “남북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오는 16일 대통령 초정 국회 상임위 야당 간사단 만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인사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이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수정·보완해 성공 기틀을 마련할 적기”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원순 “민주당원으로 서울시장 재출마”

박원순 서울시장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원으로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1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 후보로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은 물론 “일단 민주당원이니 당연히 그레야죠”라고 답했다.

서울 노원 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신당을 구성하면 함께 하겠다는 질문에 박 시장은 “사람이 누구나 원칙과 상식을 가졌다”며 “싫든 좋든 민주당원으로 이미 입당했고 당연히 민주당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

다.

그는 민주당의 경선 룰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 “서울시장이란 큰 자리는 결코 자신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가 정치공학을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면 행정이든 정치든 잘될 것”이라고 낙관적 입장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닷 올린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 암초... 힘로 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홍일표(새누리당)·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앞으로 다룰 의제의 범위를 놓고 첫 회의부터 여야의 입장이 충돌해 협력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과 같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검찰 개혁안을 사법개혁에서 다루어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논의 범위를 반(反)부패 제도 마련에 한정하고 검찰개혁은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영선 의원이다.

합의하면서 만든 문건이 있다”면서 “기준에 합의된 내용대로 범위를 확정해서 절차적 문제로 지연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주문에 ‘반부패 등’으로 규정돼 있어 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반부패 제도라는 게 사회 여러 영역에 걸쳐 있어 함의가 많은 영역을 토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같은 당 노철재 의원은 “사법제도개혁이라는 명칭이 주는 광의에서 보면 여차피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너무 범위에 제한받지 말고 신중적으로 논의하면 더 나은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첫 회의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없이 양당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미 검찰 개혁에 합의했으나 이날 사법개혁 분위기를 보면 구체적 개혁이 마련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MB일가 조세범 처벌’ 결의안

국회 기재위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조세범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 주목받고 있다.

15일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 이 대통령 일가를 조세범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 전 대통령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에게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또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을 마친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 결의안 상정을 통한 나성민 간사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시형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제세의 세금탈루조사를 거쳐 처분을 받도록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이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 요구에 따라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태양광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이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이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이상

*인증서 판매가격: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680만원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rh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총판 TEL.062)943-8804. 019-624-237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1F

임대

- ▶ 6층건물, 각층 110평, 옥상 광고탑
- ▶ 6층고급주택
- ▶ 병/의원, 약국, 커피숍,편의점
- ▶ 식당, 학원, 교회, 체인점 등등

목포 2호광장 4거리 코너 구, 맹수한의원 건물

매매

- ▶ 대지 144평, 건물 437평, 2004년 신축
- ▶ 매매가 14억 5천만원
- ▶ 분할매매가능

문의 011-611-9525 / 010-3605-5000